

## 일본의 시장개방과 지역경제권 통합

조 성 원

### I.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형성의 배경

#### 1. 아시아 경제의 고성장과 지역경제권의 자연적 형성

아시아 지역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성장 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 각국 간에는 무역과 직접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력의 약화와 그에 따른 무역마찰의 심각화를 배경으로 아시아 각국에 있어 미국의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저하하고 대신 역내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지역별 수출 의존도를 보면 역내무역의 비율이 86년의 30.9%에서 92년에는 43.1%로 상승한 반면 대미 의존도는 34.1%에서 24.2%로 저하하고 있다.<sup>1</sup>

이처럼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럽과는 달리 제도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한다거나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명확한 협정 없이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기초로 한 자연적 경제권이 미리 형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지하듯이 유럽 공동체의 경우는 1958년의 로마 조약의 조인에 의해 출발하여 그 후의 거듭되는 협정의 추진을 통하여 확대했던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을 명확한 조직으로서 확립하고자 현재 추진중인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 프로세스는 무엇보다도 위에서 말한 역내무역과 투자의 확대 기조라는 경제실태의 추이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은 그 내부에 다양한 자연발생적 교역권, 즉 국지경제권(SREZ)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도 특색이다. 예를 들어 1979년에 대외개방 정책을 표방한 아래 세계경제와의 연결과 시장경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의 유입 증대를 배경으로 기존의 화남(華南)경제권에 이어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長江) 델타 경제권, 대련(大連)을 중심으로 하는 발해(渤海)경제권이 형성과정에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서해안과 산동(山東)·동북 3성(東北3省)을 연결하는 환황해(環黃海) 경제권, 대만과 복건성(福建省)을 잇는 양안(兩岸) 경제권, 태국과 인도차이나 제국을 포함한 바쓰(baht) 경제권,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의 '성장의 삼각형', '환일본해(環日本海) 경제권' 구상 등이 존재하고 있다.<sup>2</sup> 아시아태평양 경

1 野村総合研究所經濟調査部, 「アジア経済圏の深化と擴大」, 「財界観測」, 1993. 12, pp. 63-64.

2 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양한 '국지경제권'의 발생과정과 현황에 관해서는 渡邊利夫 編, 『局地經濟圏の時代』, サイマル出版會, 1992 참조.

제권의 형성을 이러한 국지경제권의 활력을 원동력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국지경제권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세계경제의 급속한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무역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아시아 경제는 역내 수요의존형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의 대 아시아 직접투자의 형태도 이전과 같은 조립생산으로부터 일괄생산으로, 중간재의 공정간(工程間) 분업에서 최종재의 수평적 분업으로, 대미 수출 목적에서 현지 시장 확보와 일본으로의 역수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아시아 각국은 수입의 일본 의존, 수출의 미국 의존이라는 종래의 태평양 트라이앵글 관계에서 벗어나리라 예상된다. 즉 일본과의 무역관계에서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일본 기업의 현지 진출에 의해 대일 수입 의존도는 저하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는 대일 무역적자의 축소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대외수지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상호의존 관계의 심화는 한편에서는 그만큼 지역 내에서의 잦은 마찰을 수반한다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어, 앞으로 무역불균형, 산업조정 등 나국간이 동시에 관련을 갖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APEC을 중심으로 다국간 협력을 지향하는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2.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형성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를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일본에 관해 아시아와의 경제적 관련성을 약간 역사적으로 훑어보기로 한다. 패전과 함께 일본은 모든 식민지와 점령지를 잃게 되었으나 그것은 일본 경제에 그다지 심각한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전후의 세계정세 속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면모차 있다. 즉 일본은 서독과 함께 전후의 IMF·GATT 체제에 편입되면서 ‘자유 세계’의 시장을 충분히 이용했을 뿐 아니라, 전승국이 전후 세계체제의 재건, 구 식민지의 독립운동에 대한 대처에 투하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면하여 오로지 경제성장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미국이 냉전체제 하에서 ‘자유 세계’의 유지를 위해 지출한 군사비는 한국전쟁 특수 이후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롭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제2차대전에서 패함으로써 경제 분야 그것도 민수 분야에 특화하도록 강요받은 일본과 독일이 군산복합체를 껴안고 경제적 부담에 허덕인 미국과 소련을 추월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그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이식된 산업기술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 내구소비재의 생산과 보급을 촉진시켰으며, 그와 관련하여 국내시장의 확대에 크게 의존하는 이른바 ‘포드주의적 축적 체제’를 형성하는 경향을 초래하였다. 그러한 한에서 구 식민지는 제품시장으로서도 그리 필요한 것이 못되었다. 일본의 수출의존도는 전전의 1935-36년의 19%에서 고도성장기에는 10%정도로 떨어졌다. 더욱이 주요 수출선이 선진국 특히 미

국으로 바뀌고 수입선도 선진국과 중동 산유국이 중심이 되었다. 이처럼 고도성장기에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관심이 일반적으로 멀어져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성장이 끝나고 70년대의 불황기에 접어들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1972년의 일·중 국교회복, 그리고 1973년 이후의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제사정이 아시아태평양권에의 일본의 경제적 관심을 재차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는 1970년대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대하게 된다. 단 그 후 70년대 말에서 85년도에 걸쳐선 투자실적이 저조해지는데 이는 현지 내셔널리즘의 고양에 의한 외자출자 비율 규제조치가 도입, 강화된 것이 그 이유의 하나이다. 그러나 85년의 프라자 합의에 의한 엔고 현상을 계기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코스트 경쟁력이 악화되는 한편 NIES의 추격, ASEAN 국가의 적극적인 외자도입 정책으로의 노선 전환 등을 배경으로 1986년 이후 대 아시아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재차 확대 국면에 들어섰다.<sup>3</sup> 나아가 1993년 연초 이래의 엔의 급상승은 일본의 대 아시아 직접투자 붐을 한층 가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이며, 대상 업종도 제조업에서 유통 등 서비스업으로, 대상국은 NIES와 ASEAN으로부터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국으로 확산되리라 예상된다.

이처럼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은 일본을 기축으로 생산기지의 이전을 통해 NIES→ASEAN→사회주의국으로 전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아시아 지역의 국제경제적 위치가 종래와 같이 단지 생산기지로서의 공급측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경제성장에 의한 소득향상을 기반으로 제품의 수요지로서도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일본의 직접투자의 목적이 현지시장 확보(특히 중국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치중해 있다는 점이나 미국의 강고한 아시아 시장 개방촉구는 이를 말해 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다음에 ASEAN의 이해관계를 보자. ASEAN의 고성장의 원인에 관해서는 최근 많은 분석적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동지역으로의 해외자본의 대거 진출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지적한 일본 자본의 유입에 이어 88년 경부터는 NIES 국가도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화교계 기업도 직접투자의 주요 담당자로 등장하고 있다.

ASEAN의 국내 제조기업, 즉 토착자본의 경쟁력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약하며 생산능력의 확장은 외자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추진중인 AFTA(ASEAN 자유무역 지역) 구상은 직접투자의 계속적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책인데, 이는 2008년 까지 주요 품목의 관세를 0-5%까지 점차적으로 인하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분업체제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직접투자가 ASEAN에서 중국으로 이동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AFTA 구상의 발단이라고 한다.

한편 ASEAN에 있어서도 선발 NIES와 마찬가지로 고성장에 따른 노동력 부족, 지가비 등이 현재화하고 있어, 이들 국가 자체가 비용 삭감을 위해 저임금, 저지가의 이점

<sup>3</sup> 渡邊利夫・梶原弘和・高中公男,『アジア相互依存の時代』,有斐閣,1991, pp. 174-177.

을 가진 중국, 베트남 등으로 현지 진출을 꾀하고 있다.

ASEAN 국가에서는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광범한 지역에서 그룹화가 이루어질 경우 일·미·양대국에 의한 실질적 지배를 초래하고 ASEAN 6개국의 단결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한편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호의존의 진전 아래 ASEAN의 틀만으로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ASEAN으로 하여금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형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어떠한가. 앞서 지적했듯이 아시아의 입장에선 미국의 비중이 계속 저하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으로선 아시아 의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권의 고성장에 끌리기라도 한듯이 미국의 태평양측의 무역은 1980년대 초엽에 대서양측의 무역을 상회하게 되었는데, 노무라(野村) 종합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도 미국의 아시아 시장 의존도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sup>4</sup>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의 중심지 이동의 추세를 볼 때, 서유럽과 영국으로부터 미국 동부를 거쳐 현재는 실리콘 벨리로 상징되는 미국 서부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것도 일면에서 안전보장 차원의 문제도 있거니와 경제면에서 아시아와 미국 사이에 가로놓인 무역과 투자의 두터운 파이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의 형성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모두가 스스로의 경제력 신장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대는 각자가 자국의 국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태도를 고집하지 않고 협조를 유지해 나간다면 현실화되리라 생각한다.

## II. 일본의 지역경제권 통합 구상

앞에서는 주로 실태면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에 관해 논했으므로 이제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권 통합 구상의 흐름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이 문제에 관해 전후 최초로 구상을 발표한 것은 1959년에 정치가 코오노 이치로(河野一郎)에 의한 ‘태평양연합’ 창설 제안이라고 생각된다.<sup>5</sup> 여기서 코오노는 “미일 관계를 평등한 상태로 근접시키고 아시아 기타 지역의 경제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경제의 블록과 미국·캐나다의 경제공동체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구상은 당시의 학계와 실업계에 큰 반향을 부르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1965년의 코지마 키요시(小島清,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와 쿠리모토 히로시(UN

<sup>4</sup> 野村總合研究所經濟調査部, 같은 책, 前掲論文, p. 66.

<sup>5</sup> イ・イ・コワレンコ 他編, 『アジア-太平洋共同體論-構想・プラン・展望-』, 協同産業KK出版部, 1988, pp. 67-68.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ECAFE 일본 대표)에 의한 ‘태평양 자유무역 지역(PAFTA)’ 구상, 일본경제조사협의회에 의한 ‘태평양 경제협력’ 구상 등의 구체적 제안이 등장하였다. 또한 1967년에는 미키 외상에 의한 ‘미키 구상’(‘아시아태평양 협력 지역’)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구상을 이어받아 1967년에 태평양권 제국의 국제 연대를 위해, 민간재계인의 ‘태평양경제위원회’(PBEC) 및 연구자를 위한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FTAD)가 일본의 이니셔티브로 설치되었다. 이 두 기구는 68년부터 매년 한차례 회의를 열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력기구로서의 PAFTA 구상과 68년의 PAFTAD에서 제안된 태평양판 OECD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 무역개발기구’(OPTAD)의 구상은 결국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196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걸쳐 이러한 기운이 하나의 피크를 형성하게 된 정치경제적 배경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 캐네디 라운드형의 관세인하가 곤란해진 가운데 자유무역지역형의 어프로치에 의해서밖에 대규모의 세계무역 확대책을 취하기 어려웠다는 점. 둘째, EEC(유럽 공동시장) 출현에 대한 대항책. 세째로 일본에게 있어 동남아시아 자원의 개발확보 등이다.

그러나 1969~70년경을 경계로 약간의 정세변화와 함께 지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으로 후퇴한 듯하다. 즉 미국의 대외 자세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 점인데 구체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지나친 간여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는 점과, 경제면에서 달려 불안에 표현되듯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고민하여 미국 내에서의 보호주의의 대두를 유발시킨 점이다.<sup>6</sup> 그 단적인 예는 1969~71년의 미일간의 ‘섬유전쟁’에 나타나 있다.

그 뒤 지역경제권 구상이 다시 활발히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미키 외상 때였다. 미키는 1975년에 이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노무라 총합연구소에 위탁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일본총합연구개발기구(NIRA)의 ‘21세기’ 연구그룹이 집필한 『21세기로의 전략—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21世紀への戦略—危機をどう乗り越えるか』, 1978년)에 수록되어 있다. 보고서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의 석유파동을 반영이라도 한듯이 지역간 경제협력을 에너지와 철강의 문제로 집약시킬 것을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1979년에는 오히라(大平) 수상의 제안(‘환태평양 연대’ 구상)에 따라 일본경제연구센터 소장인 오라이 사부로(大來佐武郎)를 좌장으로 하는 ‘환태평양 연대’ 연구그룹이 총리부 내에 설치된다. 오라이 사부로는 직후에 외상이 되어 1980년에 자신이 의장직을 맡는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의 발족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PECC에는 선진 5개국(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 ASEAN 5개국 그리고 한국이 참여하는데, 여기서는 산관학의 각국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다고 하는 비공식적 성격이 유지되고 있다. PECC은 그 후의 APEC으로 발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의 본

6 大來佐武郎・小島清 編, 『アジア太平洋協力への展望』,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71, p. 16.

격적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단 PECC에서 APEC으로 이르는 과정은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즉 PECC은 지역간의 상호이해, 무역과 투자, 자원 에너지, 운수와 통신 등의 경제협력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가맹국 간의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 한동안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동활동을 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또한 1984, 85 두 해에 걸쳐 ASEAN이 선진 5개국과 확대외상회의를 열어 정부 차원의 회의가 제도화되는 듯이 보였으나 미일경제마찰, 선진국 보호주의의 강화로 인해 경제협력 구상이 잠시 정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체 기간을 사이에 두면서도 PECC의 활동을 전제로 본격적인 정부간 협의기구의 구축을 향해 1989년 11월 캔버라에서의 각료회의에 의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가 발족하였다.

### III. APEC의 장래상과 문제점

미국 하원이 NAFTA 비준을 승인한 직후인 1993년 11월에 시애틀에서 제5회 APEC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APEC은 역내무역의 자유화를 목표로서 뚜렷이 내걸었을 뿐만 아니라, 현안인 우루파이 라운드에 관한 '선언'과 '성명'을 공표하여 세계의 무역자유화를 주도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앞으로 APEC의 기구화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또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 APEC의 장래상이 EEC에서 EU로의 발전 형태처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합에의 일보가 되느냐, 혹은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아시아태평양판 OECD와 같은 조직으로 발전할 것인가, 또는 보다 느슨한 협의체로 머물 것인가,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전망은 아직 참가 회원국 사이에서 확립되어 있지 않다.<sup>7</sup> 현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회의 형태에 관해 APEC이 선진국 수뇌회의와 비슷한 프로세스를 거쳐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고 있는 점이다.<sup>8</sup>

7 APEC의 장래상과 관련하여, 1993년 시애틀에서의 수뇌회의의 'Vision 성명'에 있어 미국이 준비한 성명 원안에서는 APEC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Asia-Pacific Community)를 전망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 표현이 EC를 연상시킨다 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반발을 샀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의 지역사회'(a community of Asia-Pacific economies)라는 보다 느슨한 용어('지역사회'는 일본 외무성의 번역임)가 채택되었다. APEC 협인(Eminent Persons Group)회의의 일본 대표인 야마자와 이페이(山澤逸平)의 다음의 글도 참조하기 바람. 「亞太地域 經濟統合의 推進方向:開放經濟聯合의 形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지역경제』, 1993. 11.

8 주지하듯이 선진국 수뇌회의(Summit)는 제1차 석유파동 후의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긴급 개최된 이래 선진 각국 수뇌의 정기적 협의의 장으로 정착해 갔다. 참가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G7)는 더욱 빈번히 열리며 거시경제정책의 조정기능을 맡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APEC도 각 차원, 각 분야의 협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회원국간에 보다 밀접한 협조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PEC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첫째로 기구의 강화, 조직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ASEAN의 우려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그 첨병인데, 그는 스스로가 제창한 동아시아 경제협의(EAAC) 구상에 미국이 반대한 것과 APEC이 미국 주도로 되어 있는 점에 강하게 반발하여 수뇌회의를 보이콧하였다. 식민지 경험을 가진 아시아로서는 대국 주도의 장인 한 추진방식에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추진시키는 회의가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미국은 현재 NAFTA를 남미로 확대함으로써 미대륙의 지역주의 확대를 노리고 있는 한편, APEC을 강력히 지지함으로써 아시아 시장도 확보해 두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이기적이고 모순된 정책이다. NAFTA는 당초 유럽 통합이라는 '유럽의 요새화'에 대항하여 설치된 것인데 아시아의 경제력이 커짐에 따라 대 아시아 전략으로서도 위치지워지고 있다.<sup>9</sup> NAFTA가 보호주의적 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한 예로서 해외로부터의 부품 등의 조달을 규제한 현지 조달률(local content)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관해서는 62.5%로 인상되었는데, 이처럼 현지 조달률을 높이면 NAFTA의 경제협력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미국 기업으로서는 멕시코를 생산거점으로서 독점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바그와터 교수는 미국의 APEC 참가와 교환으로 NAFTA에 미대륙 이외의 지역을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sup>10</sup>

마지막으로 APEC 자체의 지역주의적 색채에 관한 문제이다. APEC은 아시아와 미대륙에 걸친 조직으로서 양지역의 블록화를 막는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APEC이 역내자유화를 실현시킨다면 EC 등 다른 지역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역사적으로 보아 APEC이 EC 통합을 계기로 탄생했으며, 그 자체가 지역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APEC이 기구화됨으로써 APEC과 EC의 2대 경제권이 길항하는 구도가 부상하고 있는데, 양경제권이 서로 반발하는 형태로 내향적이 된다면 세계경제로선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은 물론이다. 불과 반세기 전에 세계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스텔링 블록과 일본을 '맹주'로 한 '대동아 공영권'의 엔 블록으로 갈라져 끝내는 전쟁발발로 치달았다는 역사적 경험을 되새겨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APEC은 '열린 지역주의'를 명언(明言)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 '열린 지역주의'란 용어 자체가 개념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주의란 본래, 그 지역에 속한 나라들이

<sup>9</sup> NAFTA의 성립과 중남미로의 확대가 APEC 내의 친미국 세력의 형성과도 관련을 갖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NAFTA 가맹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인데 캐나다는 당초부터 APEC 참가국이며 멕시코는 제5회 각료회의에서 참가가 승인되었다. 또 현재 NAFTA 가맹 교섭중인 칠레는 94년부터 APEC 참가가 결정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친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볼 때 NAFTA의 성립, 중남미로의 확대는 미국의 APEC에서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sup>10</sup> 『日本經濟新聞』, 1993. 12. 17, 27면.

모여 지역외국가에 대한 취급과는 별도의 취급을 내부 그룹만에 대해 행하고자 하는 것 이므로, 어떤 식으로 형용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내향적이고 역외 차별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같은 성격을 갖지 않는 지역주의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sup>11</sup>

이상의 제문제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APEC의 향후 전개방향을 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다.

#### IV. 일본의 시장개방 문제

지역경제권 통합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일본의 현안이 시장개방 문제이다. 일본의 무역흑자는 불황 속에서도 1993년에 1,414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6.9% 증가의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무역흑자는 일본이 수출에만 힘을 쏟고 수입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사실 일본의 시장은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개방적으로 되고 있으나 미국 등은 자유화의 속도가 여전히 느리다는 불만을 품고 있다. 나아가 일본시장의 폐쇄성은 외국기업의 진입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인허가 등 보호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에 무역마찰의 문제란 개개 상품의 무역량에 관한 것 이었으나 최근에는 일본의 경제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로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본 내의 여론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마찰 해소책에 관한 미국측의 논리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즉 미국이 일정 기한 내에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수입량의 목표 설정은 시장기구를 무시한 결과 위주의 관리무역 그 자체이다. 또한 미국은 이전부터 내수 확대에 의한 수출증대라는 견지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해 왔는데, 정량적 수치 목표의 설정은 정부 규제의 재강화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자가당착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치 목표를 내건 수입 확대책(VIE)은 수출 자율규제(VER)와 마찬가지로 목표달성을 위해 일본의 산업이나 기업의 카르텔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데 이는 현재 일본이 취해야 할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모순된 요구 속에 미국의 초조감과 성급성을 엿볼수 있겠다. 자유무역의 '기수'임을 자임해 왔던 미국으로서는 대외적으로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태도를 견지하고, 또한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 스스로도 재정적자 삭감, 저축의 증가, 경쟁력 강화 등의 자구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본으로서도 다음과 같은 시점에 입각해서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일본은 자유무역 체제에 의해 가장 큰 이득을 얻은 나라가 다

<sup>11</sup> 山神進 編, 『アジア太平洋地域の時代—APEC設立の經緯と展望—』, 第一法規, 1994, p. 115.

름아닌 자국이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여 시장개방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고용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만이 돌출하여 방대한 경상흑자를 증대시켜 세계의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실업을 수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자자한 가운데 일본은 일국 번영주의, 일국 평화주의의 발상에서 탈피하여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구축에 적극적인 공헌을 해야 할 것이다. 민간 쟁크탱크의 시산에 의하면 시장개방과 규제완화에 의한 효과는 약 15조 엔의 수요증대와 82만 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고 한다.

둘째로 이제까지의 시장개방 조치는 ‘외압’ 아래 이루어져 온 까닭에 대미 양보로 받 아들여져 왔으나, 실제로는 일본의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을 상기 해야 한다. 전후 일본은 경제부흥을 위해 기업중시의 산업보호 정책을 일관하여 취해 왔는데, 그것은 무수한 공적 규제와 정·관·재의 유착구조(‘일본주식회사’)를 놓았으며 소비자이익의 회생을 수반하였다. 시장개방은 정부규제의 완화, 배타적 상거래 관행의 개선, 독점 금지법의 엄정한 운용, 유통기구의 합리화 등을 촉진시킴으로써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과 소비자 이익의 실현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측 주장에 포함된 일방적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거부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장기적이고 국제적 시야에 서서 일본 스스로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시장개방은 비단 선진국 간의 경제마찰의 해소를 통해 세계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일본 경제 자체의 진정한 합리화, 나아가 아시아 각국과의 협조적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도 중요한 관건인 것이다.<sup>12</sup>

<sup>12</sup> 아시아 각국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80년대 이후 일본의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85년 이후 대일 수출 촉진단의 과견과 수출 유망 품목의 선정 등 대일 수출 촉진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만도 88년에 ‘시장분산 5개년 계획’을 작성하여 지나친 대미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일본, 유럽 등으로의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시장개방은 주로 미국에 대한 시장개방이라는 성격이 짙다. 예를 들어 85년에 일본이 발표한 ‘시장 Access 개선을 위한 Action Program’의 내용에 대해 그것이 구미를 향한 것으로서 아시아로부터의 수입확대에는 기여하지 않는다는 각국의 불만이 일어났다. 따라서 일본은 앞으로 아시아를 배려한 시장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한편 ASEAN, NIES 등도 각국의 경제수준의 상승에 걸맞게 자체 없이 수입, 외자규제 등을 완화하는 상호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수훈

1994 「전지구화, 지역주의화 그리고 국지화의 특징과 내용」, 『경제와 사회』, 여름호 (22호).

山神進 編

1994 『アジア太平洋地域の時代—APEC設立の經緯と展望—』, 第一法規.

渡部福太郎

1994 『世界經濟の分裂と統合』, 有斐閣.

中川信義 編

1994 『アジア・北米經濟圏と新工業化』, 東京大學出版會.

富士總合研究所 編

1994 『飛躍する東アジアと日本』, 中央經濟社.

佐佐木潤

1994 『一體化する北米經濟—NAFTA時代の到来—』, JETRO.

早房長治

1994 『アジアはこれからどうなるか』, ダイヤモンド社.

川勝平太 監修

1994 『新しいアジアのドラマ』, 筑摩書房.

渡邊利夫 編

1992 『局地經濟圏の時代』, サイマル出版會.

渡邊利夫・梶原弘和・高中公男

1991 『アジア相互依存の時代』, 有斐閣.

相田利雄・小林英夫 編

1991 『成長するアジアと日本産業』, 大月書店.

イ・イ・コワレンコ 他編

1988 『アジアー太平洋共同體論—構想・プラン・展望—』, 協同産業KK 出版部.

パオロ・チエッキ-ニ

1988 『EC市場統合・1992年』, 東洋經濟新報社.

西川潤

1988 『世界經濟入門』, 岩波書店.

渡邊誠

1987 『環太平洋經濟共同體序曲—21世紀の日米關係—』.

大來佐武郎・小島清 編

1973 『アジア太平洋經濟圏』, 日本國際問題研究所.

同 編

1971 『アジア太平洋協力への展望』, 日本國際問題研究所.

조성원, 고려대학교(조치원) 경제학과 교수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북동 330-285

Tel : (0415)60-1510(O), 744-6800(H)